

거버넌스의 투명성과 혁신을 위한

정보공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미션

정보공개를 통해 모든 시민이 알 권리를 누리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사회를 만듭니다.

중점
영역

시민역량 강화 비밀해제기록 공유
네트워크 구축 정책연구

알권리 정책 확산
알권리 침해 대응

알권리

뭘 알아야 말을 하지!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간섭 받지 않고 의견을 가질 자유와

모든 매체를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고,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 세계인권선언 제19조 –

정보공개와 알권리

국민이 국가권력의 방해를 받지 않고 의사 형성이나 여론 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접근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이에 대한 방해를 제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
(헌법재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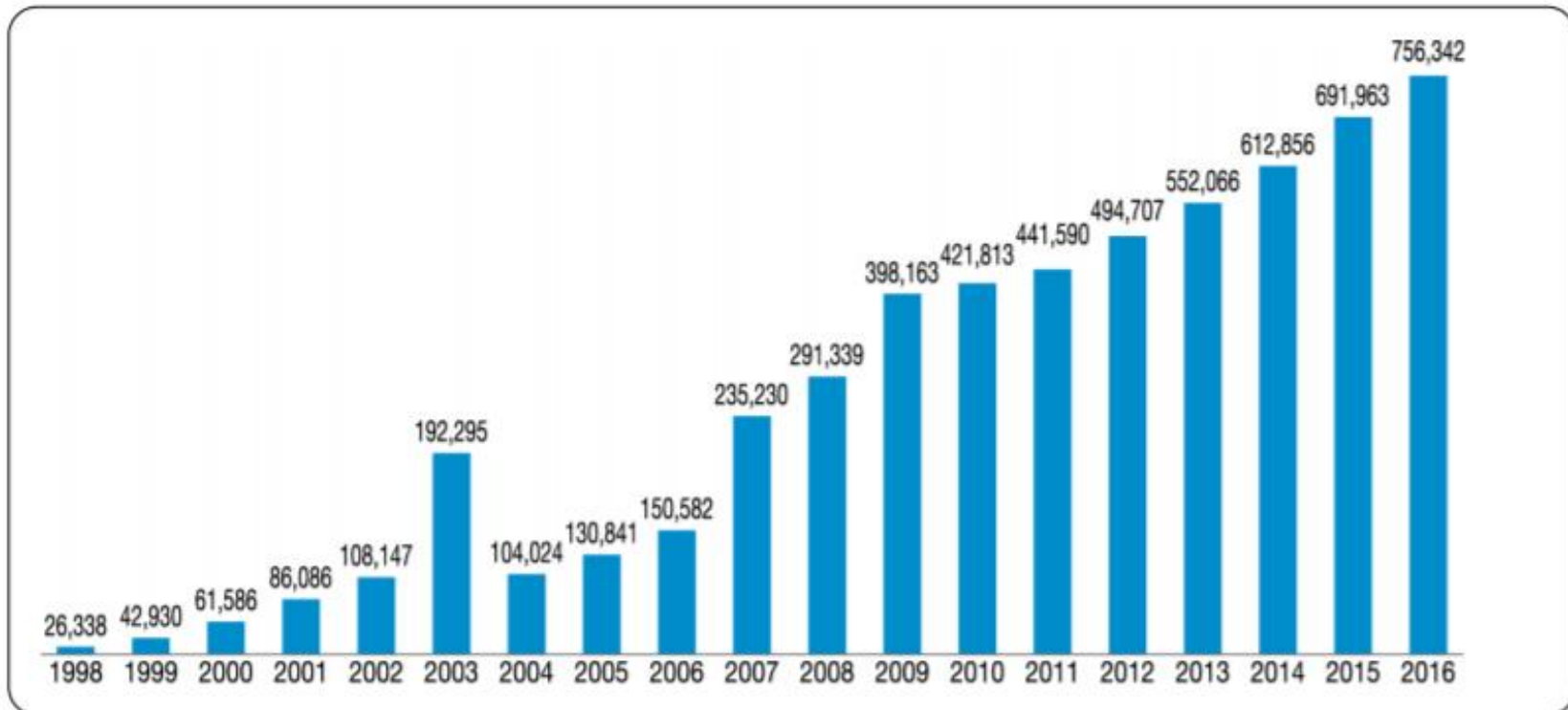
정보공개제도의 목적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적극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있다.
(행정안전부)

우리 제대로 알 수
있습니까?

정보공개제 제도 등의 변화

- 1991. 청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
- 1994.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국무총리훈령제288호)
- 199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명: 정보공개법) 제정 (법률 제5242호)
- 199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 1998.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 창립
- 1999.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명: 기록물관리법) 제정
- 2003. 행정정보 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국무총리훈령 제442호)
- 200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
- 2006. '열린정부' 사이트(www.open.go.kr) 개통'
- 2008.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창립
- 2009. 미국 'Data.gov' 서비스 개시
- 2009. '열린정부' 사이트 '정보공개시스템'으로 개명
- 2013.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로 '정부3.0' 채택
- 2013.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정
- 2014. 정보공개시스템, 대한민국정보공개 포털(wonmun.open.go.kr)로 전면 개정.
- 2017. 문재인 정부 기록물관리법과 정보공개법 전면 개정을 국정과제로 채택

늘어난 정보공개청구



그들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HOME > 오피니언

국정교과서 집필진 비공개, 알 권리 파괴하는 정부

[인권오름]

강성국/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간사 | 승인 2015.12.04 11:09

사회go

靑, '의사결정과정' 이유로 박근혜 7시간 비공개 "근거없는 발언"

[세월호 3차 청문회] 대통령 기록물 지정시 '박근혜 7시간 행방' 30년간 접근 불가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Tweet 좋아요 154개 댓글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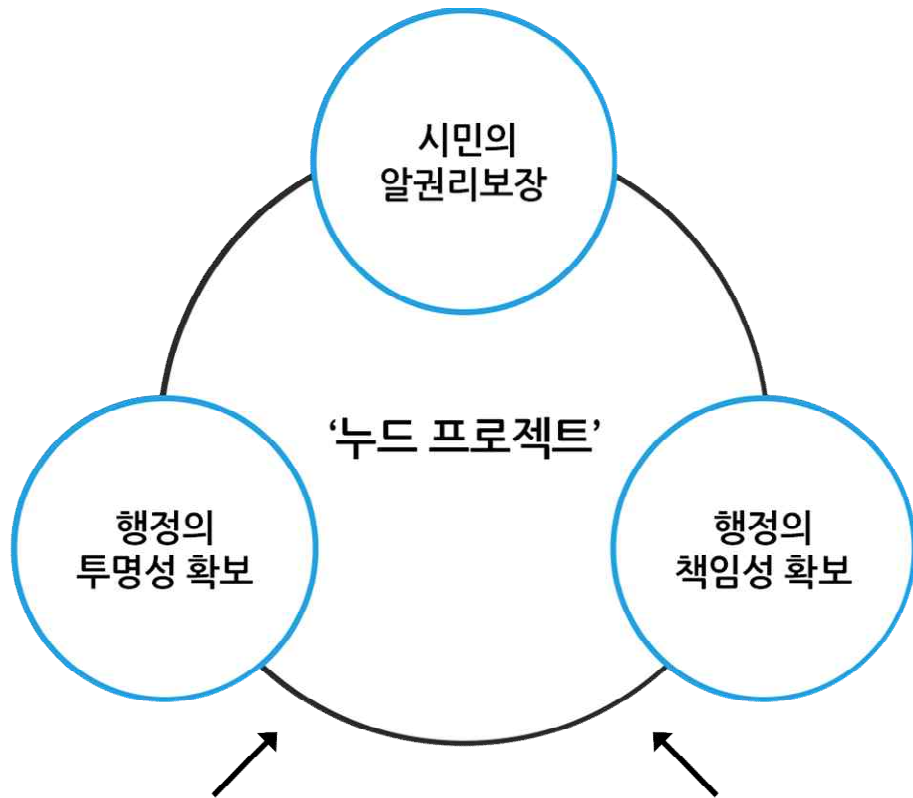


그들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국가가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 누드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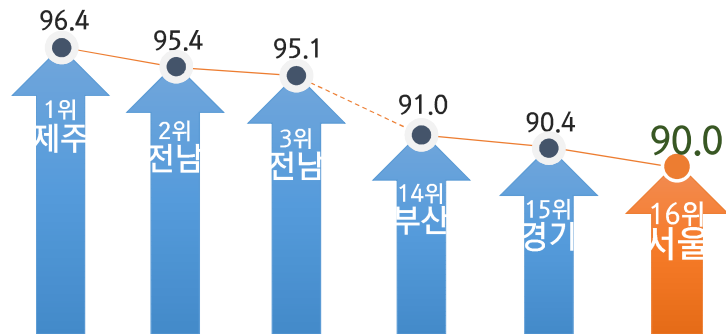
법령에서 정한 비공개사항을 제외한 모든 행정정보를 투명하게 완전공개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



서울시 누드 프로젝트

-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정보공개 전담부서 설치 및 전담전문인력 배치
- 자치구 및 산하기관의 정보공개 및 기록관리 업무 인센티브 사업으로 추진
- 알권리 관련 조례 제개정 추진



2010년 서울시 정보공개율



정보공개율 증가 (2012년도 상반기)

기억을 되살려보자 '정부3.0'

투명한 정부

1.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2.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3. 민관 협치 강화

유능한 정부

4. 정부 내 칸막이 해소
5. 협업 소통 지원을 위한 정부운영 시스템 개편
6.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

서비스 정부

7.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
8. 창업 및 기업활동 원스톱 지원 강화
9. 정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10.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창출

정보 원문공개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정부 3.0 대한민국정보공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 사이트

사전정보 | 원문공개 | 공개청구 | 공개현황 | 공개제도

국민이 찾기전에
원문 그대로 공개합니다.

장·차관, 시도지사가 결재한 정부공개 문서,
간단하게 확인하세요.

사이트 방문이 처음이세요?
사용방법을 알려드려요!

문재인정부의 정보공개 , 공공정보 영역 주요 실천 과제

1. 대통령 등 정부 주요인사 일정 공개: 정보공개포털을 통한 실시간 통합 공개
2. 정보공개 · 기록관리제도 전면 개편 (2018년)
3. 온라인서비스 · 정책정보를 한곳에서 제공하는 ‘정부24’ 개통, 국민 개인별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 (2017년)
4. 공공빅데이터센터 설치 · 운영, 범정부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2019년)
5. 공공기관 공시시스템의 정보제공 내용 대폭 확대, 공공기관 종합포털로 발전, 국민 참여마당 신설 (2019년)
6. 경영정보공개시스템 고도화 (2018년)
7. 조세통계 정보공개 획기적 확대 (2017년 국세청 납세자 보호위원회 신설)
8.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영업비밀 심사제도 도입, 일정규모 이상 사업장 안전 · 보건관리업무 위탁 금지 등 제도 개선
9. (화학물질 유해정보 확보 공개) 1톤 이상 모든 기존 화학물질(7천종)의 정부 등록 의무화 및 영업비밀 남용 차단을 위한 사전 승인제 도입 (2018년)
10. (인체직접적용제품 등에 대한 안전 강화) 인체직접적용제품 독성 DB구축 (3천건), 인체위해성 평가 및 공산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11. 대국민 재난정보 전달체계 전면 개선. 2020년까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12. 2018년까지 지진 조기경보체계 개선, 지진 조기경보시간 7초~25초로 단축
13. 2017년부터 기상정보 전문예보관 양성, 수치예보기술 개발 및 2021년까지 한국형 날씨 예측 모델 운영 통해 맞춤형 스마트 기상정보 제공
14.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지방 행정 · 재정 정보공개 확대
15. (안전한 수산물 공급) 2019년 수산물 이력추적관리제 단계적 확대

투명하고 책임 있는 사회
를 위해

알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 향후 헌법 개정 시 국민 기본권으로 ‘알권리’ 성문화
- 정보공개법 전면 개정을 통한 ‘알권리’ 확대
 - 정보공개위원회 위상 강화
 - ※ 현행: 행정자치부 소속 심의기구 / 개선: 대통령소속 정책결정 기구
 - 정보공개전문관 제도 도입
 - 정보공개 대상 기관 확대 추진
 - 벌칙 조항 도입 등 공공기관의 책임과 의무 구체화

정보공개 영역의 확대

- 생명, 안전, 건강, 교육, 복지 등 5대 국민관심분야의 정보공개 확대 및 강화
 - 가슴기살균제, 불산 누출사고 등 기업의 유해화학물질 관리정보 공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넘어 공공정보의 공개로
- 정책 제안, 결정, 평가 과정의 주요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함으로써 국민 참여 확대
 - 회의공개제도 도입, 회의의 기록관리 강화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혁신

○ 공공기관의 공개지향적 문화 정착

- 사전공개 대상 정보의 심화 확대
- 감사 정례화 등 공공기관 대상 정보공개 평가 강화
- 정보공개 내실화를 위해 인센티브 및 패널티 제도 도입
- 정보공개 우수사례 도입 및 확산

○ 국민의 편의에 맞춘 공공정보 접근성 개선

- 정보공개포털 등 정보공개시스템 재설계
- 오픈 포맷 기반의 행정정보 생산, 유통, 활용 체제 구축